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이 규 용\*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0년 들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자 고용사정도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 취업자 동향을 보면 1월에 4천 명, 2월에 125천 명 그리고 3월에는 267천 명이 증가하여 고용회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2010년 1/4분기 고용률은 57.0%로 전년동기에 비해 0.4%p 하락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업자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222천 명이 증가한 1,130천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구직활동의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

최근의 고용동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일자리 증가는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1/4분기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391천 명 증가한데 비해 300인 이상 대기업 임금근로자수는 19천 명이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의 일자리 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상용직 일자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증가폭도 커지고 있는 반면에 일용직 일자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상용직 일자리 증가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지만 고용계약 관행의 변화가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감소 배경에는 경기적 영향, 일용직 종사자의 타부문의로의 취업, 외국인근로자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는 불가피한 만큼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20대(20~29세)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에 청년층 취업자수는 115천 명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7.9%를 기록한데 이어 2010년 1/4분기에도 취업자수는 41천 명이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9.1%를 기록하였다. 특히 300인 이상 규모에서 2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청년층의 구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leeky@kli.re.kr).

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최근 고용사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층 고용사정의 악화, 일용직 일자리의 감소, 자영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세 지속 그리고 낮은 고용률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첫째,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통해 고용량을 늘리고, 둘째, 양질의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 우수인력의 유희화를 방지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력을 나타내는 고용률 제고 문제는 경제주체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15~64세 기준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08년 기준으로 OECD 30개 국가 중 22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수준이 낮다는 문제와 높은 경제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04년에서 2008년 기간에 우리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등은 이 기간에 고용률이 3~4%p 증가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폭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성장과 고용성장이 상호 정합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동안 우리는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고성장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기조로 이야기하여 왔다. 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같은 경제성장하에서도 더 높은 고용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자.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이 더 커지도록 정책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자.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 경제주체들간의 노력과 협력이 보다 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주장과 구호가 아닌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운용과정의 내실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도 결국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령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성장이 시너지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영역에 부합하는 우수인력 공급정책이 수반되어야만 성장과 고용의 윈-윈이 가능하다.

끝으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생산과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에게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이익추구 노력을 결합함으로써 건강한 시장이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지는 노력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환원될 것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확대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젊은 세대가 건강하게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미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기업이 특히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KLI**